



중소벤처기업부

## 보도자료

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

하나 된 열정  
하나 된 대한민국

- 문의 :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 김영태 과장(042-481-4383), 김정주 서기관(4536)  
송제훈 사무관(4425)  
벤처투자과 박용순 과장(042-481-4416), 곽재경 서기관(1640)  
최민혁 사무관(4526)  
투자회수관리과 김주화 과장(042-481-1644), 이호중 사무관(4422)

## 「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」 발표

- 민간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 -

- ◇ 민간전문가가 혁신성·성장성 중심으로 벤처를 선별
- ◇ 투자 및 운용규제 최소화,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
- ◇ 민간이 제안하고 모태가 출자하는 민간제안펀드 도입

-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1.31일(수) 벤처업계와 정책 Talk Concert를 통해 「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」을 발표

< 중소기업부 장관과 벤처업계간 벤처혁신 Talk concert >

- 일시/장소 : 1.31일 14:00~15:30, 마루 180
- 토론패널 : 김봉진 대표((주)우아한형제들), 이택경 대표(매쉬업엔젤스), 문규학 대표(소프트뱅크벤처스), 류중희 대표(퓨처플레이, 중기부 정책기획단 벤처분과장)

- 同 대책은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“벤처확인제도, 벤처투자제도, 모태펀드” 등 벤처기반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대책임

- 벤처정책을 “官 → 民 주도”로 전환하면서 관련 법률의 제·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벤처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\*하여 대책을 마련

\* 특히,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.25일.1.27일.1.29일 벤처기업협회장, 벤처캐피탈협회장 등 벤처업계와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

## I. 추진 방향 및 원칙

◇ 목표 : 민간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

◇ 3대 추진원칙

- ① **민간 선도** :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원(민간-정부간 역할 재정립)
- ② **시장 친화** : 수요자 맞춤형 제도운영으로 정책효과 극대화
- ③ **자율과 책임** : 민간의 자율성은 높이되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

⇒ 벤처확인·벤처투자·모태펀드 등 **기반제도의 개편을 우선 추진** 하고, **이후 벤처생태계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혁신을 추진**

### 〈 금번 벤처생태계 혁신 대책의 추진전략 〉

####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

혁신성·성장성  
중심으로 벤처선별

벤처투자시장의  
자생력 강화

시장친화적  
모태펀드 운용

##### 문 제 점

공공기관의 획일적  
벤처확인 → 4차 산업  
혁명에 걸맞은 벤처  
기업 선별시스템 미흡

진입제한, 투자대상 및  
펀드운용 방식에 대한  
사전규제 → 민간자본  
유입의 한계로 자생력 약화

공급위주의 획일적  
벤처투자 견인  
→ 민간주도의 벤처투자  
및 민간 자율성을 제약

##### 개선방안

##### 벤처확인제도 전면 개편

- ① 벤처확인 주체를 민간 벤처전문가로 변경
- ② 보증대출유형 폐지, 신기술 성장유형 신설
- ③ 벤처기업 금지업종 폐지(사행·유흥업종 제외)

#####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

- ① 벤처캐피탈 진입요건 완화
- ② 최소 규제로 펀드운용의 자율성 강화
- ③ 창업·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

##### 모태펀드 운영방식 개편

- ① 민간투자 견인에서 후원으로 운용방식 개편
- ② 시장실패 영역에 충분한 모험자본 공급
- ③ 펀드 운용의 책임성, 효과성 강화

## II. 추진 과제

### 1 벤처확인제도 전면 개편 : 민간중심의 벤처기업 선별

#### □ 주요내용

- ① 공공기관이 아닌 벤처전문가(선배벤처, VC 등)로 구성된 민간 벤처 확인위원회가 벤처 선별
- ② 기술혁신성,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확인 유형 개편
  - 보증·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신기술 성장 유형 신설
    - \* 대출 회수 가능성 등 재무적 시각 → 기술 혁신성, 성장 잠재력 등 심사 강화 (법률 개정 이전에는 기보·중진공에 민간 벤처확인 자문단을 설치·운영)
  - 벤처투자 유형은 다양화된 스타트업 투자자를 반영하여 인정 범위 확대 (現 13개 → 6개 투자자\* 추가)
    - \* 액셀러레이터, 클라우드펀드, 기술지주회사, 신기술창업전문회사,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, 엔젤매칭투자 받은 개인투자자 → 1,600여개 기업 벤처확인 신청 가능
  - 연구개발 유형의 경우 연구인프라 인정요건을 기업부설연구소로 한정하고 있으나, 연구개발 전담부서\* 등으로 확대
    - \*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약 25,000여개 기업이 벤처확인 신청 가능
- ③ 벤처기업 진입 규제 철폐
  -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 (23개) 폐지 (단, 사행·유혹업종 5개 제외)
  - 벤처기업 규모 제한을 완화하여 초기 중견기업\*까지 확대
    - \* 매출 3천억원 미만, 단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제외
- ④ 신청기업 중심의 벤처확인제도 운영
  - 기술성 평가가 강화된 만큼 벤처확인 유효기간을 2년→3년으로 확대하고, 탈락기업 대상 컨설팅(벤처 첫걸음 Care 프로그램) 지원 도입

## □ 추진 일정

- 법률이 아닌 하위규정 개정사항\* → '18.4월까지 개정·시행

\* (시행령) 벤처진입 금지업종 폐지,

(고 시) 민간벤처확인 자문단 설치(기보·중진공), 「벤처 첫걸음 기업 care 프로그램」 도입

-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 → '19년 시행

\* '18.2월, 벤처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→ 6월 국회제출

### < 벤처확인제도 개편 전후 비교 >

구분	현행	개선
벤처확인 주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보·중진공·벤처캐피탈협회 → 공공기관 중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민간 벤처확인위원회 신설 → 민간 전문가 중심</li> </ul>
벤처확인 유형별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보증·대출 유형) 8천만원 이상 보증·대출 금액 등의 요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보증·대출 유형 폐지 → 신기술 성장 유형 신설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벤처투자 유형) 13개 기관투자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창업투자회사 ⑧개인투자조합</li> <li>②창업투자조합 ⑨산업은행</li> <li>③신기술금융업자 ⑩기업은행</li> <li>④신기술투자조합 ⑪은행</li> <li>⑤벤처투자조합 ⑫경영참여형 사모</li> <li>⑥전담회사(한국 집합투자기구</li> <li>벤처투자㈜) ⑬외국투자회사</li> <li>⑦전문엔젤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6개 투자자 유형 추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⑭엑셀러레이터</li> <li>⑮클라우드펀드(전문투자자 3천만원 이상 투자)</li> <li>⑯기술지주회사</li> <li>⑰신기술창업전문회사</li> <li>⑱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</li> <li>⑲개인투자자(엔젤매칭 투자를 받은 경우)</li> </ul> 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연구개발 유형) 1개 R&amp;D 인프라만 인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기업부설연구소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3개 R&amp;D 인프라 추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②연구개발전담부서 ③기업부설창작연구소</li> <li>④창작전담부서</li> </ul> </li> </ul>
벤처진입 규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금지업종) 23개 업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여관업 ⑬골프장 운영업</li> <li>②그외 기타 숙박업 ⑭노래연습장 운영업</li> <li>③일반유흥 주점업 ⑮무도장 운영업</li> <li>④무도유흥 주점업 ⑯기타 gambling 및</li> <li>⑤기타 주점업 베팅업</li> <li>⑥비알콜 음료점업 ⑰이용업</li> <li>⑦주거용건물임대업 ⑱두발미용업</li> <li>⑧비주거용건물임대업 ⑲피부미용업</li> <li>⑨기타 부동산임대업 ⑳기타미용업</li> <li>⑩주거용건물 개 ㉑욕탕업</li> <li>발 및 공급업 ㉒마사지업</li> <li>⑪비주거용건물 개발 ㉓기타 미용</li> <li>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</li> <li>⑫기타 부동산 개발</li> <li>및 공급업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폐지(단, 사행·유흥업종 5개 제외)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일반유흥 주점업</li> <li>2. 무도유흥 주점업</li> <li>3. 기타 주점업</li> <li>4. 무도장 운영업</li> <li>5.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</li> </ol> </li> </ul>
신청기업 편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기업규모) 중소기업 한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초기 중견기업 포함(매출 3천억원 미만)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유효기간 2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유효기간 3년</li> <li>• 벤처 첫걸음 기업 care 프로그램 도입</li> </ul>

## □ 주요내용

## ① 벤처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민간중심의 투자생태계 조성

- (투자주체) 벤처펀드의 공동 운용사(Co-GP)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\*하고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\*\*

\* 펀드의 자금조달과 회수 및 기업의 성장(상장 등) 환경을 개선

\*\*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지원

- (펀드결성) 민간자금만으로 자유롭게 펀드 결성이 가능토록 한국 벤처투자조합(KVF)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을 폐지

- 벤처펀드가 다른 개인·벤처펀드에 출자하여 민간 모펀드가 결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펀드 운용의 전략성·수익성을 강화

- (전문인력)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요건을 '자격증·학력 중심 → 투자 및 산업계 경력'으로 현실화

## ② 벤처펀드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보장하여 민간자금 유입 촉진

- (투자대상) 창업투자의무만 준수할 경우 기업 규모(중견기업까지 허용)와 소재지(해외도 가능)에 무관하게 자유롭게 투자를 허용

- 투자금지 업종을 폐지하여 다양한 융·복합 분야 투자를 촉진

\* 현행 투자금지 업종 열거 → 사행성, 미풍양속 저해만 포괄적으로 금지

- 투자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펀드의 기업인수목적회사(SPAC)\* 투자를 명시적으로 허용\*\*

\*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: 다른 기업을 인수하여 상장시키기 위해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페이퍼컴퍼니('09년 도입), 금융업으로 분류

\*\* 현행 금융업 투자금지, 상장기업 투자제한 → 투자허용, 상장기업 투자로 미간주

- **(투자방식)** 실리콘밸리식 투자방식(SAFE\*)을 허용

\*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: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기업에 적합한 투자방식으로 先투자자의 투자지분이 후속투자시 결정되는 투자방식

- **(투자 의무)** 창업투자회사 자본금과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던 투자 의무 기준을 **총 자산**(자본금+운용펀드, 3년 이내 펀드는 제외)으로 **유연화**

\* (예시) 2개 펀드 운용 시, 하나는 창업투자를 전담하고 다른 펀드는 후속투자, 해외투자 등 수익성 중심으로 운용이 가능

▪ **창업투자 의무를 펀드규모별로 차등화**하여 운용 자율성을 확대

\* 펀드규모별 창업투자 의무비율을 추후 하위법령에서 규정

(예시 : 일정규모 이상 창업투자가 이루어진 대규모 펀드는 창업의무비율을 하향하여 적용)

③ 복잡다기한 투자제도를 **단순화·체계화**하여 수요자 편의성 제고

- 창업법(창업투자조합)과 벤처법(벤처투자조합)으로 이원화된 **벤처펀드를 일원화**하고 **벤처투자제도를 전체적으로 체계화**

벤처법	창업법	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(법률 제정)				
모태펀드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	창투자 창업투자조합 엑셀러레이터	⇒				
		전문엔젤 개인투자조합	엑셀러 레이터	창업 투자 회사	벤처투자 조합	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

- 일원화된 벤처투자조합 중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는 정책목적에 따라 투자하고, 민간자금으로 결성된 펀드는 최소규제 원칙 적용

□ **추진 일정**

○ '18.2월 벤처투자촉진법 입법예고

○ '18.6월 국회 제출 → '19년 시행

**<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이후 펀드 규제 비교 >**

구 분	현행 (창업법, 벤처법 2원화)		개선 (벤처투자촉진법)
	창업법(창업투자조합)	벤처법(한국벤처투자조합)	벤처투자조합
운용 주체	창업투자회사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유한(책임)회사	창업투자회사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유한(책임)회사, 외국투자회사	현행 운용주체에 <b>액셀러 레이터, 증권사 등*</b> 추가 * 단, 증권사 등은 기존 운용 주체와 <b>Co-GP</b> 인 경우만 허용
최소결성	20억원	<b>30억원</b>	<b>20억원</b>
결성방법	등록제	신고제	등록제
창업투자 의무	펀드별로 40% 이상 창업기업 투자	-	<b>총 자산* 규모별로 의무비율 차등화</b> * 자본금 + 펀드총액 → 펀드총액이 클수록 의무비율 낮음
해외 투자	先 창업투자자의무 준수, 後 40% 이내 해외투자 가능	제한없이 가능	<b>제한없이 가능</b>
중견기업 투자	창업투자자의무 비율 준수 후 가능	<b>투자 불가능</b>	<b>투자 가능</b>
투자금지 업종	금융업, 부동산업, 숙박·음식점업 등	금융업, 부동산업	사행산업, 미풍양속 저해 경우만 포괄적으로 금지
투자방법	<b>지분, 주식연계 채권</b>		<b>조건부지분인수계약 추가</b>
모태 출자	모태조합 출자없이 펀드 결성 가능	<b>모태조합 출자 필수</b> (M&A, Secondary 분야 예외)	<b>모태조합 출자없이 펀드 결성 가능</b>
책임성 강화	-	-	연대보증 요구, 반복적 규정위반 → 등록 취소
기타	SPAC 가능여부가 불투명, Fund of funds 설립 불가		<b>SPAC 투자 명시적 허용, Fund of funds 설립 가능</b>

□ **주요내용**

- ① “**확일적 투자건인 → 민간투자 후원**”을 통해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
  - 민간이 투자분야·조건을 제안하는 **민간제안 펀드 도입** (‘18년 2천억원)
  - 모태펀드에 대한 민간출자자의 **콜옵션을 대폭 확대** (20 → 50%)
  -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**우선손실충당 확대**
  - 성과중심의 펀드 운용을 위해 **성과·관리보수의 자율설계 허용**
- ② 모태펀드는 시장실패 영역에 집중하면서 **충분한 규모의 자본을 공급**하여 민간투자의 마중물로서 기능
  - ‘18.3월까지 **정책목적 펀드 1.8조원 조성** (‘17. 추경 8천억원 출자사업)
    - \* 분야(억원) : 청년창업(6천), 4차산업혁명(8천), 재기지원(3천), 지방(350), 지적재산권(180)
  - ‘18년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으로 **1조원의 정책목적 펀드 조성**
    - \* 분야(억원) : 혁신창업(6,100), 소셜임팩트(1,000), 민간제안(2,000), 여성 등 시장실패(700)
- ③ 모태 지원을 받은 운용사에 대한 정기 성과평가와 일자리 창출 우수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**펀드운영의 책임성·효과성 강화**
  - 불공정 계약 요구, 반복적 규정 위반 시 창투자 등록취소 등 **강력제재**
  - 외부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**정기적 VC 실태조사**, 시정권고 등 필요조치
  - 일자리 창출 우수펀드는 모태펀드 수익의 **10~15%를 성과보수로** 지급하고, 펀드 운용사 선정 시 우대

□ **추진 일정**

- ‘18.2월 펀드모집 공고 → ‘18.7월 모태 자펀드 결성 완료
  - \* 단, 민간제안 펀드는 연중 수시로 운영

**< 모태펀드 운용방식 개편 전후 비교 >**

구분	현행	개선
운용방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획일적 투자견인</b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민간투자 후원</b></li> </ul>
펀드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先 정부 출자분야 조건 설정, 後 민간자금 모집(<b>Top down</b>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민간제안펀드</b> 도입('18년 2천억원)</li> <li>• 민간 既 결성펀드에 대한 <b>모태펀드 후행 출자(Bottom up)</b> 도입</li> </ul>
보수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펀드 결성액의 일정비율로 <b>일률적 지급</b>*</li> <li>→ 투자성과와 무관</li> <li>* 관리보수 : 펀드규모별 2.1~2.5%</li> <li>* 성과보수 : 기준 수익률 초과 수익의 20% 이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맞춤형 보수체계</b> 도입</li> <li>→ 투자성과 중심 펀드운용 유도</li> <li>- VC가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연동하여 자율 설계하는 것을 허용</li> </ul>
민간자금 유입 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모태펀드의 <b>우선손실충당</b>을 <b>제한적으로 허용</b></li> <li>* 일부 정책목적 펀드에 한정</li> <li>• 모태지분 <b>콜옵션</b>의 <b>소극적 허용</b></li> <li>* 청년, 재기지원, 지방펀드에 한해 20% 이내로 콜옵션 부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적극 확대</b></li> <li>→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금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</li> <li>• <b>모태지분 콜옵션 대폭 확대</b></li> <li>- 정책성 펀드는 최대 50%로 확대</li> <li>- 기타 펀드는 20% 이내로 도입</li> </ul>
일자리 창출 성과 제고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일자리 창출 우수펀드</b>는 모태수익의 10~15% 이내를 <b>성과보수</b>로 지급</li> <li>• 일자리 창출 우수 운용사는 추후 모태펀드 출자 시 <b>우대</b></li> </ul>
VC 책임성 강화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외부 전문가 그룹의 VC 실태조사(연중)</b></li> <li>• 벤처기업 대상 설문조사 실시(연 2회)</li> <li>• 연대보증 요구 반복적 규정위반 → 등록 취소</li> </ul>

### Ⅲ. 기대 효과

<p><b>활력있는 벤처투자 시장 조성</b></p>	<p><b>신규 벤처투자 규모 4.4조원</b></p> <p>2.4조원      3.7조원      4.4조원</p> <p>'17      '20      '22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시장친화적 모태펀드 운영,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이는 투자규제 폐지로 민간자금의 벤처펀드 유입을 촉진</li> </ul> <p>⇒ 연간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24조원('17년)에서 4.4조원('22년)으로 약 1.8배 확대</p>
	<p><b>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(%)</b></p> <p>0.37      0.28      0.18      0.13      0.23</p> <p>미국      중국      영국      한국 '16 → '22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민간자금 유입확대 등으로 신규 벤처투자규모가 증가 →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 0.13%('16년)를 '22년까지 0.23% (+0.1%p)로 증가</li> </ul> <p>⇒ 벤처투자시장이 벤처강국 그룹 수준에 근접한 모험자본을 공급</p>
<p><b>벤처가 혁신성장 주도</b></p>	<p><b>매출 1,000억원 벤처기업 800개 이상</b></p> <p>550여개      700개 이상      800개 이상</p> <p>'17      '20      '22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혁신성·성장성있는 기업을 벤처로 선별하여 모험자본을 집중지원</li> </ul> <p>⇒ 매출 천억원 벤처를 '17년 550여개에서 '22년까지 800개 이상 육성</p> <p>* '12~'16년간 벤처투자(8.5조원) 대비 매출 1천억 벤처 증가 수(+97개) : 1개 당 876억원 소요 → 신규 벤처투자('17년 2.4조원 '18~'22년 약 17조원 목표) 및 경제성장을 2.8% 고려</p>
	<p><b>유니콘 기업 8개</b></p> <p>2개      2개      8개</p> <p>이스라엘      한국 '17 → '22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GDP가 우리의 1/4 수준(약 3,500억 달러)인 이스라엘이 우리와 같은 수의 유니콘 기업(2개)을 보유</li> </ul> <p>⇒ 벤처생태계를 혁신하여 GDP 규모에 걸맞는 유니콘 기업을 육성(2→8개)</p>

#### ※ <별첨>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 대책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송제훈 사무관(☎ 042-481-1682, 벤처확인제도), 벤처투자과 객재경 서기관(☎ 042-481-1640, 모태펀드), 최민혁 사무관(☎ 042-481-4526,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